

보복폭행 능장수사 “경찰수뇌 강타”

서울경찰청장 전격 사의 ... 청탁 드러나면 한화그룹 · 경찰조직 위기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홍영기 서울경찰청장이 5월25일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능장수사와 외압설로 야기된 후폭풍이 앞으로 과연 어떤 파괴력을 보일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조직의 <사실상 2인자>인 홍영기 서울청장의 사퇴는 자체로도 상당한 충격이고 앞으로 불어닥칠 강력한 파장을 알리는 신호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서울경찰청장이 최후수단인 사퇴라는 방법을 택한 점은 다른 경찰 수뇌부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이제부터 한화측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는 인사는 책임을 피할 구실을 찾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화측이 보복폭행 사건 이첩과 관련해 경찰 수뇌부에 청탁을 한 정황이 통화내역 조사 등으로 사실로 드러나면 경찰은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경찰 간부의 판단 잘못이나 개인적 처신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숙원사업인 <수사권 독립> 논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다.

<보복폭행>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처음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갔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대문서로 이첩됐고 이후 수사가 한달 이상 사실상 중단되면서 한화 로비설, 경찰 수뇌부 개입설 등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총수 출신인 최기문 한화그룹 고문, 모 경찰 고위간부와 고교 동문인 한화증권 Y고문 등 한화그룹 관계자들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찰은 경찰청 감사관실의 감찰조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해 난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낙관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감찰조사의 성격상 강제수사를 통한 물증 확보나 외부인 조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체조사라는 한계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주로 예정된 경찰청 감사관실의 감찰조사 결과발표에서 “의혹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경찰의 다짐처럼 모든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수사과가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장의 <조폭 접촉>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경찰 고위간부를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진실이 규명될 가능성은 적을 수밖에 없다.

만일 경찰 자체 감찰조사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검찰 등이 수사에 착수하거나 정치권 등에서 추가 폭로가 잇따르면 더욱 큰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25>